

069

김포-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신고절차 간소화

규제개선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력을 기웁니다!

“항공화물 환적은 신속함이 생명인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려면 매번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A사의 호소입니다. 현재 김포공항에 입항하는 환적화물의 97%가 인천공항을 통해 환적됩니다. 그런데,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등 신고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적절한 시간 내 환적이 어려워 우리나라의 공항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대외 경쟁력이 더욱 커집니다. 국내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환적 하는 화물의 입항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적으면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 화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새로운 환적화물 수요를 창출하게 됐습니다.



- 절차간소화로 신규 물동량 3,000톤, 175억원의 부가가치 예상



개선 전

김포-인천공항 환적화물 신고절차 복잡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를 따로 해야만 인천공항으로 이동 가능

개선 후

김포-인천공항 환적화물 신고절차 통합

김포공항에 도착한 환적화물은 입항 시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면 반출입신고와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

'환적화물 특례고시' 개정 (관세청, '14.8월)

문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904)

070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대한민국, 특송물품 물류허브로 거듭나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물품들, 한국을 거치면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Y씨는 업무상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일이 많지만, 미·중간 국제우편 요금이 너무 비싸 부담이 큽니다. 중국의 세관 통관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까닭에 특송으로 주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항공 물류 규제가 풀리며 이제 다른 나라끼리의 전자상거래 물류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옮겨 실어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배송되고 있던 화물을 한국으로 반입한 후 EMS로 바꿔 보내면 최대 60%까지 저렴해지니, 미·중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세 속에서 한국 물류 시장이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및 신 부가가치를 창출, 고용창출 효과 확대
- 환적 물류 신규 유치를 통한 연간 3,6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개선 전

공항으로 들어온 제3국행 특송화물을 국제우편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

개선 후

통관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3국 간 거래되는 특송화물을 공항으로 반입한 후 우리나라 국제우편(EMS)으로 바꿔 보낼 수 있게 됨
EMS 환적물품 시범운영 (관세청, '14.5월)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071

모바일 의료용 앱 관리 기준 정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건강 체크합니다!

"우리 병원이 개발한 앱이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대학병원 의사인 J교수는 당황했습니다. 몇 달전 J교수는 전립선암 발견 확률을 계산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입소문을 타며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의료기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식약처의 검토를 받으란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해당 앱은 의료기기로 판단 됐고, J교수는 뒤늦게 의료기기 허가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인 의료용 앱을 의료기기로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해 혼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료용 앱이 진단 오류를 내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판매기가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면제되고,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이 생겨나며 많은 개발자들이 혼란 없이 안전한 의료용 앱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 국민보건 위해요소 사전차단 및

신시장 활성화

(전망)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2017년) :
230억 달러(28조원)



개선 전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수
안전 관리방안 부재

개선 후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 면제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적용(14, 12, 26, 현장적용)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민현주 의원, '14.6월 발의)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